

의료사각 해소 ‘농촌왕진버스’…가난한 시·군엔 ‘그림버스’

기존 사업 바꾸며 정부·농협이 냈던 사업비에 지자체 부담 추가
전남 8개 시·군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사업 참여 엄두조차 못내
전남도 “사업 참여 독려하지만 지자체 여력 안된다면 도리 없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지만 정작 농촌이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지역 군단위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올해 2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마을 강당·체육관 등 임시 진료실을 차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들에게 양·한방, 구강검사, 치과, 검안, 물리치료 등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9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300여개 마을과 15만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목포(신안)·여수·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함평 13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한다.

반면 광양·나주·무안·보성·순천·진도·해남·화순 등 8개 시·군은 사업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단위인 광양·나주·순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데도, 예산 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사업에 불참했다.

진도군은 전체 인구(2만 8323명)의 38.7%(1만 962명)가 65세 이상이고 해남군도 전체 인

구(6만 2557명)의 38.4%(2만 4043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진도군,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의료형평성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참여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재원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2015~2023)’ 사업이 지난해 ‘농촌왕진버스’로 바뀌었는데, 기존 정부와 농협만 사업비를 부담하면 됐던 것과 달리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어하는 시·군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건강검진·상담·한방진료를 제공하는 ‘전남건강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참여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실종자 수색 작업

지난 폭우로 80대가 실종된 지 일주일 되는 23일 광주소방안전본부가 광주시 남구 시산동 황룡강변에서 소방인력 172명, 소방 장비 65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택시요금 오른다는데 마을버스는?”…운송업자들 ‘부글’

적자 운영에 요금 현실화 촉구
운송조합원 28일 집회 열기로

광주시가 택시 요금을 2년만에 재차 인상한다고 잠정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마을버스 운송업자들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9년동안 버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마을버스도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며 ‘버스 요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 5개 마을버스(6개 노선) 운송업체로 구성된 광주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원 50여명은 오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모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은 광주시에 “올 하반기 개학 시기에 맞춰 버스요금을 현실화 하라”며 “마을버스에 대한 구체 정책을 세우고 시·구매칭 적자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업체에 따르면 광주시 5개 마을버스 운영사 적자액은 2021년 12억 1800만원, 2022년 20억 9100만원, 2023년 22억 6100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조합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광주시가 2016년 이후 9년째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한 점을 꼽고 있다. 일반 요금 기준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의 요금으로는 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합은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시비로 당해 연료비상승분의 70%를 지원했으나, 그 이후 지

원이 폭 뚝뚝했다는 주장도 내놔다.

조합은 “시내버스의 적자는 한 대당 연간 1억 5000만원, 마을버스는 3500만원 수준이라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5분의 1만 지원해줘도 거뜰하다”며 “엄연한 법적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적자를 해소하려면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버스 요금 인상, 노선 개편 등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올해 택시요금 인상을 기본요금 4800원(기본거리 1.7km), 거리운임(132m)·시간운임(32초)당 1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찰, 청연한방병원 대표이사 징역 7년 구형

171억 빌려 갚지 않은 혐의

검찰이 17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이상영(46)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2020년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원장에게는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08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면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했던 뜻마저 부당하다는 것 같아 아쉽다. 재기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농어촌버스 4년간 적자 3000억인데…

전남도 손실 보전금은 50%→30% 축소…최선국 도의원, 대책 촉구

전남지역 농어촌 버스가 지난해 800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적자만 3000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런 상황에서 적자노선 지원액을 축소, 도민들의 교통 편의성 보장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민주·목포

1)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전남지역 시내·농어촌 적자노선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4까지 4년 간 2895억원에 이른다.

적자노선 손실액은 2021년 500억원대에서 2024년 9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내·농어촌 적자노선 손실액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남도는 도가 부담해온 손실 보전액 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 30%로 줄였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대비 약 60억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긴축재정 예산편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 대중교통 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는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PROPERTY-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IGA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대책본부